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보고자료

비 전 2011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

2002. 1. 16

재 정 경 제 부
한국개발연구원

《 목 차 》

재정경제부 일반현황

Vision 2011 작업의 추진경과

I. 향후 경제여건 전망	3
II. 우리경제 성장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5
1. 경제시스템 측면	5
2. 새로운 성장동인 창출기반 측면	5
III.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	8
1. 2011년의 비전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9
2. 추진원칙과 전략	10
IV.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11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11
2.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12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13
4. 경제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13
5.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14
V. 맺음말	15

재정경제부 일반현황

□ 주요기능

- 장·단기 경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조세제도 및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고·국유재산관리 및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의 집행
- 외환 및 외채관리정책의 수립
-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조 직

- 본 부 : 1차관보, 1정책관, 2실, 6국, 7관 42과(담당관 포함)
 - 기획관리실, 세제실
 - 경제정책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국민생활국
 - 공보관, 비상계획관, 세제총괄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관세심의관, 정책조정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 소속기관 :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금융정보분석원
- 외 청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정 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본 부	2	411	16		85	514
국세심판원		68	1		21	9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10				10
금융정보분석원		39		6	1	46
계	2	528	17	6	107	660

* 금융정보분석원은 재경부 24인과 타부처(법무부등) 22인을 포함한 정원임

< Vision 2011 작업의 추진경과 >

- ◇ 지난해 5.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비전 2011 프로젝트」 추진결정
- ◇ KDI를 중심으로 미래학회 등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진행
 - '01.6.8일 KDI에서 작업지침 마련
 - '01.6~7월 16개 작업반별 보고서 작성
 - * 각 작업반의 보고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하였으며,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참고 전문가로서 참여
 - '01.7~9월 작업반별 2~3회씩 공개토론회(36회) 개최
 - * 16개 분야를 대표하는 29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
 - '01.9월말 KDI 중간보고서 작성
 - '01.10~11월 중간보고서에 대한 지방순회토론회(5회) 공청회개최(11.12~13일)
 - * 경실련, 민간연구기관 및 언론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 '01.12월~현재 KDI 최종보고서 마무리
- ◇ 금년 2월 중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예정

I. 향후 경제여건 전망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두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지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로 급속히 전환

-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
- 앞으로 노동과 자본투입보다는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될 전망

* 우리의 잠재 성장율은 70~80년대 8%, 90년대 6~7% 수준에서 향후 10년간은 5% 수준(고성장 전제시)으로 추정

< 잠재성장율 전망 (2000-2020) >

(%)

	1971~	1981~	1991~	2001~2010		2011~2020	
	1980	1990	2000	고성장 ^{주)}	저성장 ^{주)}	고성장 ^{주)}	저성장 ^{주)}
실제성장율	7.4	8.6	6.1				
잠재성장율	8.2	8.0	6.7	5.1	4.4	4.1	3.3
요소투입	5.2	4.5	3.4	2.4	2.2	1.9	1.7
노동투입	3.1	2.6	1.5	0.3	0.3	0.2	0.2
자본투입	2.1	2.0	1.9	2.1	1.9	1.7	1.5
생산성증가	3.0	3.5	3.4	2.7	2.2	2.2	1.6

자료 : KDI

주) 고성장 : 성공적인 구조개혁 및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저성장 : 구조개혁 실패 또는 기술혁신 부족으로 생산성 증가에 실패할 경우

세계화의 심화

-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
 - 금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로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 증권화가 가속

디지털경제의 확산

- 인터넷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 및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 정보통신,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등의 기술혁명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

동북아 경제의 성장

- 동북아는 향후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
 - 중국경제가 2015년경에는 미국 규모에 접근(연평균 7% 성장가정)할 전망
 -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진척으로 우리경제의 동북아 중심지화 촉진

고령화사회의 전개

- 2020년(15.1%)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7.2%)의 2배 수준
 - 노동공급의 축소와 함께 연금, 의료비 지출 증가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우려

Ⅱ. 우리경제 성장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시스템 측면

외환위기이후 기업·금융·노동 및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시장경제기반 구축 등 상당한 성과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

(예) 금융부문 : 시장참여자의 관행·의식 등 소프트웨어 개혁,
경영혁신과 민영화

기업부문 :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노동부문 : 노사간 신뢰정착, 법에 의한 분쟁해소

공공부문 : 재정 및 공기업 효율화, 전자정부 구현 등

2. 새로운 성장동인 창출기반 측면

가. 연구혁신능력의 부족

기술집약적 산업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저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은 실정

*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품목 수는 한국이 55개로서 독일 669개, 미국 618개, 일본 354개 등에 비해 크게 저조

지식기반형 산업은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나 이에 필요한 지역기반산업의 집적화와 R&D 산학협동이 취약

○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집적화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사후평가 능력은 취약

- 경제규모에 비해 **연구역량이 분산**되고 시장, 기업보다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IT, BT, ET, CT, NT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우며 **전략적 선택**이 필요

나. 정보화의 파급효과 미흡

- '90년대 IT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非IT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미흡
-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영 등 IT화가 확산되기에는 아직 사회적 신뢰가 낮고 정보가 불투명
- (예) IT화 촉진저해요인 : 조세회피(무자료거래), 금융관행(어음거래), 조직의 관료화, 불투명한 경영 등

다. 외국인투자(FDI) 지원제도의 실효성 미흡

-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저가의 단순 생산요소 조달보다 **숙련인력** 등 선진국 수준의 생산능력에 기인하나,
- 현재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정책수단은 조세감면, 토지임대 등 **단순비용지원**에 머물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응 노력이 부족

라. 낙후된 서비스부문

선진국에 비해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낮으며 생산성도 미흡

* 제조업 대비 서비스부문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

: 한국 55.3('99), 미국 90.1('95), 일본 85.1('99)

* 서비스부문의 GDP 점유비중

: 한국 49.0%('00), 미국 77.3%('98), 일본 62.1%('98)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에도 부담으로 작용

* 물류비/매출액(% , '99년)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마. 경직된 인적자원 양성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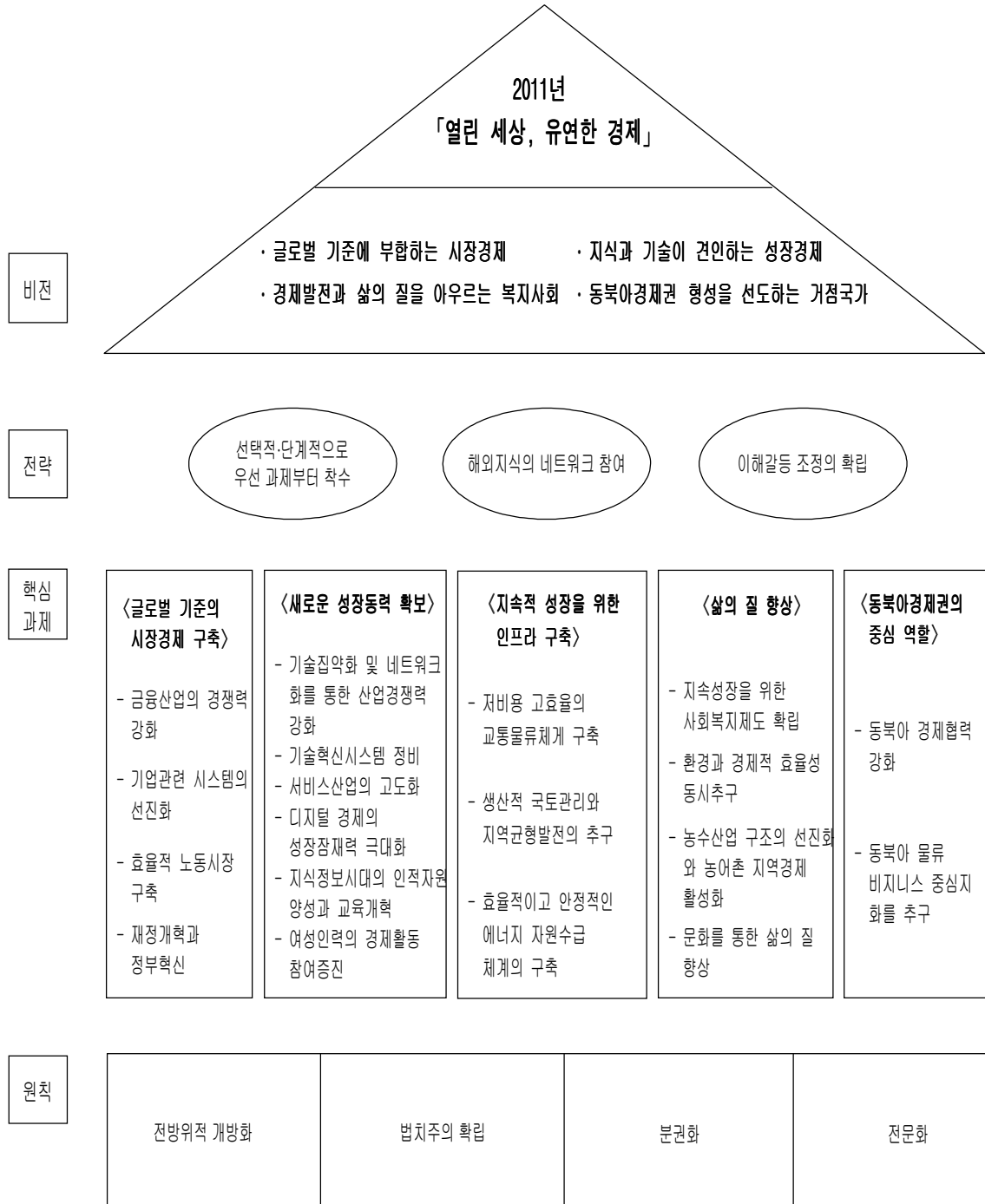
고등 교육·훈련기관이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어 현장의 인력수요와 괴리

○ 대졸자는 초과공급이나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전문기술직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

중등교육은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약

여성인력은 고령화사회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주요 원천이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

Ⅲ.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



1. 2011년의 비전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점증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식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과 기술이 새로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는 경제

◇ 경제수준에 맞게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

-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체제가 구현된 사회
- 문화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

◇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

-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을 위하여 당사국들을 연계시키고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2. 추진원칙과 전략

가. 추진원칙

- 경쟁을 통한 혁신지향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 개방화의 추진**
-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기존의 규범과 관행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신속하게 전환
- 급변하는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의 **분권화와 전문화 확대**

나.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거 추진**
 - 파급효과가 가장 큰 핵심과제를 선택적으로 우선 추진
- 이해갈등 조정기구의 확립**
 - 도출된 우선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리더십 확보**가 중요

IV.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 기업관련 시스템의 선진화

- 이해관계자에 의한 기업감시를 강화하고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예) 외부감사·공시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상시평가,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 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육성 등

- 장기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재벌이 규율**되도록 경쟁정책을 운용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금융시스템 위기예방, 건전성 감독 등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기능 확대

-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경영혁신, 신용평가 하부구조 등 **확충**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공적 자금회수 등을 위해 **민영화 추진**

□ 노동시장의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을 지속 추진

-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노사관계 구축
- 재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

2.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지역이 산업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개편
- 지역산업정책에 관한 권한의 이관·분권화 촉진
- 국가 R&D, 산학연 협동에서 산업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정책적 차별을 축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IT와의 접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 유도

- 교육에 있어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속에 학생의 선택권 확대
- 대학의 특성화·전문화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 (예)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 부담률 인상, 탁아시설 설치지원, 탄력적 근무제 등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 수도권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간의 **win-win 전략** 추진
 -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자생적 성장능력**을 배양
-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
 - 그 동안 도로위주의 투자패턴에서 철도·항만 투자를 보다 확대
 - * 현재는 도로부문이 총교통투자의 60% 차지
 -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교통수요 조절
-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와 수요절감**을 위한 시장가격체계의 강화
 - 非중동지역의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동북아에너지 협력 체제를 구축

4. 경제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제도 확립**
 - 연금부담, 급여수준 등 연금구조를 개편하여 **연금수지의 안정성 확보**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유인 저하, 노동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편**

□ 농업 및 환경부문에의 시장경제 원리 강화

- 환경자원 사용 인센티브, 오염분쟁 조정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오염배출 축소, 재활용 촉진체계 구축**
- **개방과 시장기능 중시**로의 정책전환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도와 경영규모 확대로 보완

□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의 대중화·상품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

5.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 추진

- 적극적 개방의 추진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 휴양단지로 집중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금융산업, 첨단산업 등 비즈니스 국제거점으로 발전

□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와의 연결 추진

⇒ **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한반도 시대」의 기반구축**

V. 맺음말

□ 향후 5~10년내에 동북아·태평양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

○ 중국의 급부상속에 우리경제가 동북아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의 경쟁과 협력구도 속에 우리의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노력이 중요

○ 제조업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금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

*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5~10년후에 중국이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 동시에 우리경제의 중장기비전 실현과 위상확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개혁의 추진이 중요

○ 최근 일부 중남미국가가 경제위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정치불안 속에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

○ 영국, 뉴질랜드 등은 과거 개혁시작 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함으로써 장기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

◇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간이 특히 중요

○ 과거 외환위기 등의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필요

○ 이를 위해 일관성있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